

# 2005 APEC 정상회의 의제 : IT · e-Business 준비 동향



이 정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jtlee@krivet.re.kr

## 서론

2005년은 우리나라가 APEC 총회 의장국인 해이다. 정부는 이미 2003년 9월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 기획단」을 발족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12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20~30회에 걸친 각종 APEC 회의 준비를 위해 1년 이상의 긴 여정에 들어갔다.

2005 APEC 의제로 IT · e-Business가 공식화 되지 않았다. 여기서 APEC 의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APEC 주제(Theme)가 있고 의제(Agenda)가 있다. 주제는 2004년 의장국인 칠레에서 고위직 회의(SOM, Senior Official Meeting)를 거쳐 정상회의(Leaders' Meeting, 매년 11월 개최) 직전에 열리는 각료회의(MM, Ministerial Meeting)에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공식화된다. 의제는 그 해 의장국이 당해 년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APEC를 끌고 갈 것인가를 정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1월과 12월에 「APEC 정상회의의 준비 기획단」이 전문가회의를 거쳐 코엑스에서 발표회를 가진 의제가 IT · e-Business 이었다는 사실은 IT · e-Business가 APEC 주제가 아닌 의제가 될 개연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그 외 2005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중요시할 의제는 세 가지다. 9. 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APEC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테러 대책강구,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 그리고 APEC 개혁이다. 이상이 주요한 중심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준비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 단계 APEC 과제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2005 의장국임이 갖는

선진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팔 시장 확보가,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해소가 과제다.

2005 APEC 회의는 양쪽을 접목시킬 점점 확보를 위한  
신뢰구축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의미를 약술한 다음, 민·관 협력 명제에서 본 IT·e-Business 의미, 디지털 격차해소 명제에서 본 IT·e-Business 의미를 짚어 보고, 구체적 접근방안으로서 민·관 협력 우선분야에 대한 만장일치 유도과 합의위임 협정 체결(Modalities)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substantial)·구속적(binding)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론

현 단계 APEC 과제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개혁의 절박성이다. APEC는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실질적이고 구속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고 논의의 장과 운영방식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APEC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

APEC 개혁과제는 지난한 과제이다. APEC는 OECD나 WTO와 달라 '느슨한 협의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파푸아뉴기니처럼 1인당 GNP가 US\$300 수준부터 미국처럼 3만불 수준에 이르는 높은 격차 말고도 문화·정치체제가 다양·다기한 국가들과 홍콩, 대만과 같이 독립국가로서 체제 자체가 확고하지 않은 회원들도 있어서 성격자체가 독특한 측면도 있다. '느슨한 협의회'로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모든 것은 가능한 상태에서, 뭐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국제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5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더 늦기 전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APEC로 자리매김하는 해로 2005년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이다. 1994년 1차 정상회의(Leaders' Meeting, Bogor, Indonesia)에서 APEC 정상들은 무역·투자 자유화시기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으로 결정하였다. 2005년 그 중간점검의 해이다. 중간점검의 성공요체는 무엇인가.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판단을 위한 거의 유일한 근거자료는 모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개별행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이다. 만약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그것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보고서(Template)의 질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해당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장애요소들(법, 제도, 관행 등) 때문인지를 진단하고, 성공예측과 대안을 모색할 논의의 장, 추진, 결론 도출에 있어서 수월성을 담보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반테러 대책강구이다. 1993년 1차 APEC 정상회의(미 워싱턴 브레이크 섬)에서 APEC 비전으로 「안정, 안전, 번영(Stability, Security, Prosperity)」을 채택하였다. 9.11 테러와 디지털격차로 이 비전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9.11 사태 이후 매년 APEC는 반테러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선

언문채택 등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세계적 현상으로 노정되고 있는 바, APEC도 이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5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IT·e-Business 의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항, 호텔, 회의장을 디지털 첨단화하되 안전문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로 민·관 협력의 시너지 효과 거양이다. APEC의 정점은 정상회의다. 정상회의를 장관회의와 고위관료회의가 받쳐주고 있다. 실무회의(Working Group Meeting)도 따지고 보면 정부 관리들이 의장(Lead Shepherd)을 맡는 경우가 많다. 결국 APEC의 중심에 정부관리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투명성(transparency), 통합성(integration), 이동성(portability), 연관성(inter-connectivity)을 경쟁력의 축으로 삼는 디지털·세계화 시대, APEC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장과 민간의 투입(Input)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전략이 바로 민·관 협력이다.

민관 협력 명제로 본 IT·e-Business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관 협력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들어보자. 첫째는 융합(blended)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IT·e-Business 적용 및 활용방안 그리고 APEC 분야별 장관회의, 실무그룹회의 등 각종 포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21 회원국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으려면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무역(Paperless Trade), 전자 물류(e-Logistics), 전자 학습(e-Learning), 전자 의료(e-Health) 등 솔루션의 혁신과 어디서나 실시간·실수요자 적기전달(ubiquitous)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디지털 격차 해소 명제에서 본 IT·e-Business 의미도 꼼꼼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APEC 21 회원국 중 개도국과 선진국간 디지털 격차 실상의 핵심은 이렇다.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과 정부 고위층의 디지털 마인드 IT 정책 능력 배양이 당면과제다. 반면, 선진국은 기술 포화(saturated)와 인력난으로 인한 시장 확보가 과제다.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소요되는 엄청난 자금압박을 해소해야 하고, 선진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팔 시장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양 쪽을 접목시킬 점점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투자회수 확신을 위한 신뢰 구축이 문제다.

## 결론

2004년 연초 시점에서 200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성과를 점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대신,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제언에 앞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성공을 위한 확신·추진력·성공 공감대 형성력에 있어서 21 회원국 어디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IT강국으로서 적지 않은 나라의 시샘과 경쟁의 눈초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첫째, APEC 회의 최첨단 디지털화의 추진과 디지털 격차해소의 적극적 추진에 있어서 수월성 현시이다. 배지(Badge)와 지문인식으로 보안검색기능을 디지털화하고 회의장에서 발표자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에 동영상과 통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최첨단 기술의 현시와 더불어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

우리 정부는 성공을 위한 확신·추진력·성공 공감대 형성력에 있어서  
21 회원국 어디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IT강국으로서 적지 않은 나라의  
시샘과 경쟁의 눈초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진되어야 할 문제는 작금 세계적 현상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다. 이상 두가지 방안의 동시 추진이 선진국과 개도국 양 쪽으로부터 시샘과 저항을 줄이고 IT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브랜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품화시킬 비결이다. 2005년은 바로 코 앞에 다가오는데 '잘해보자' 식 구체적 대안마련은 이미 때 늦은 감이 있다.

둘째, APEC 민간기구(PECC, PBEC, ABAC), 각종 포라(WGs, TILF, ECOTECH, SOM, MM)를 관통

하는 주제와 의제의 초안, 논의, 결정, 추진, 후속조치, 평가 등 전 과정마다 협력과 조정의 수월성을 보이기 위한 정·산·학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의 탁월한 지도력을 기대하여 본다.

준비와 추진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우리 나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2006년 의장국인 베트남이 APEC 회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 모델이 된다면 2005년 APEC 회의를 위한 민관협력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회수의 좋은 여건조성이 될 것이다.<sup>19) 21</sup>